"전북형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두세훈 도의원, 5분발언서 "재정상태 점검 후 중장기 계획과 함께 지급해야"

전북도가 6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해 전북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전북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전북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게 두 의원의 의견이다.

두 의원은 "올해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2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포함한 1,800억원의 순도비를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후, 재정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기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북도가 갚아야 할 빚으로 "향후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총 4,932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을 2027년부터 10년 동안은 매년 원금 기준 479억원에서 35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1,257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2023년까지 전북도 현장인건비 기준 722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후 매년 383억 원을 순도비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며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한시적으로 보전되 균특지방이양사업이 폐지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에 비해 순도비로 사용될 수 있는 지방소비세가 줄어들어 전북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전북도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향후 전북도가 정작 필요한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재정 운용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23년부터 줄어드는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난지원금에 막대한 재원을 총동원하는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전북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전북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해야

성경찬 도의원, 정부에 건의

전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기존 장항선을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연장하는 일명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구축 시 무안·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와 대량 수송 및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돼 낙후된 서해안권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며 "그러나 정부는 해당 사업이 경제적인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하던 국가균형 발전의 이념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국토 공간구조의 다변화 등 정책환경과 시너지 효과가 있음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경찬 의원은 "정부는 인구와 각종 산업 기반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서해안권 지역의 발전 동력확보를 위해서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에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유호상기자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들어서다 전북도와 순창군이 13일 발효 미생물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준공식에서 노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과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이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1면〉

현금 여력 없는 1가구 1주택 실거주 고령자들 숨통 트이나

민주 김수흥 의원,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부 허용 담은 법 개정안 발의… 만 60세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해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문화재수리업체 경쟁 치열… 소외 없이 배려를"

최영규 도의원, 5분발언서 문화재수리업 지원육성 필요성 역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13일 열린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문화재수리업 지원육성'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전국에는 총 618개 업체, 도내 업체는 4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일반 건설토목업과 달리 시장이 한정돼 있는 만큼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도내 문화재수리업 발주 건수는 전통사찰 시설공사를 포함해서 3년간 183억3,600만원 규모로 연간으로는 61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전통사찰 시설공사는 3년간 112억1,400만원으로 71억2,200만원 규모의 문화재 수리 분야보다 시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통사찰 시설공사에서 3건 중 1건이 타 지역업체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화장실 개보수와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도내 업체를 소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최영규 의원의 주장이다.

최영규 의원은 "3년간의 전통사찰 시설공사 51건 중 입찰에 부쳐진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찰별로 구성되는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의해 업체선정이 이뤄진 만큼, 얼마든지 지역업체 배려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문화재수리업체 지원 육성 차원에서 전북도가 불교계와 적극 소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봉안당 신축 부지 변경 방안 마련

전주시의회 복환위

전주효자추모공원 내에 신축 예정인 봉안당을 다른 부지에 옮겨 짓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봉안당 신축 예정지 변경은 해당 부지에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주된 이유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효자동 전주 승화원과 봉안당을 찾아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봉안당을 짓기로 계획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다른 부지에 터를 잡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봉안당 부지는 처리 비용 170억~350억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건축지를 인근의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조만간 인근 부지를 매입해 봉안당을 새로 짓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봉안당 신축 예정지는 지표에서 5미터 아래에 7만톤 정도되는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처리 비용만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명의 정읍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 됐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인체형상 性기구 판매' 리얼돌 체험방 주거지역 영업 금지

이용호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해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해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지역에서는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박희자 도의원 "환경교육 전담팀 구성 절실"

전북도의회 박희자(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제3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시대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 요구와 현 상황을 대처하기에 부족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환경교육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5가지 전략 중 '악화되는 지구 보호하기' 정책을 내세운 정부정책에 발맞춰, 도내 교육현장 속 환경교육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코로나19 종식 선제적 방역행정 촉구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은 13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역행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피해가 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늘고 있다"며 "국민의 두려움과 피로감 역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무증상, 미검사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격리와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에 따라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방역소독, 자격격리·확진자·해외입국자 관리 등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근무 인원수와 근무 인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방역행정 서비스를 전 국민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